

# 시진핑 시기 중국 공산당의 사영분야 정책에 관한 연구\*

윤태희\*\*

##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시진핑 시기 사영분야 관련 정책:<br>주요 특징과 난점 |
| II. 시진핑 시기 사영분야 주요 정책<br>과 흐름 | IV. 결론                               |

## | 논문요약 |

본 연구에서는 시진핑 시기 전개된 사영분야 관련 정책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한다. 시진핑 시기 국가는 사영분야의 육성과 지위 개선의 방침을 지속 전개하였으며, 사영분야 당조직 건설을 통한 정치적 침투와 통일전선 업무를 통한 젊은 세대 사영기업가의 포섭을 추진하였다. 또한, 친밀하고 청렴한 신형 정상관계를 제시하여 국가-사영기업가 간의 상호작용 방식에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당국의 정책적 변화 속에서 시진핑 시기 사영분야의 양적 성장, 사영분야 당조직의 확대, 젊은 세대 사영기업가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중국몽에 대한 동조, 정부 당국과 기업가 간의 새로운 유형의 상호 교류 등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으로, 신형 정상관계 제시 이후 정부관료의 보신주의와 그에 따른 기업가의 불만, 사영분야를 위한 대출원의 확보, 미중 무역갈등 및 COVID-19 등의 다양한 변수는 사영분야 관련 정책에서 고민이 필요한 과제로 제시될 수 있다.

▪ 주제어: 시진핑, 중국 공산당, 사영기업가, 통일전선, 신형 정상관계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의 학술연구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연구교수

## I. 서론

개혁기 중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사영분야의 성장과 부상이다.<sup>1)</sup> 사영분야의 성장과 발전은 중국의 경제성장을 추동하였는데, 마오쩌둥 시기 사영분야는 이데올로기적 사유로 제한, 이용, 개조, 소멸의 과정을 거쳐 거의 존재하지 않는 수준이 되었으며(康德顏 2018), 1978년의 경우 전체 공업 총량에서 사영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1% 수준에 불과하였다(王瑞芳 2018).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새로운 당노선으로 채택하고, 경제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선언하면서(조영남 2006, 29; 조영남 2009, 90), 사영분야는 개혁개방 이래 경제성장과 신규 일자리, 세금의 주요 원천으로 부상하게 되었다(Dickson 2003).

그에 따라 사영분야의 성장과 발전에 따른 국가-사영기업가 관계의 변화는 개혁기 중국을 이해하는 중요한 연구 주제로 대두되었다. 많은 국가와

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中華人民共和國憲法)>에 따르면, 전민소유제(全民所有制)와 노동 군중 집체소유제(勞動群眾集體所有制) 등의 사회주의 공유제(社會主義公有制)와 달리, 개체경제(個體經濟)와 사영경제(私營經濟) 등의 비공유제 경제(非公有制經濟)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 구성요소로 정의된다. 개체호는 7명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한 소규모 자영업자를, 사영기업은 8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영리적 목적을 가진 경제조직체를 의미하는데(정종호·윤태희 2016), 양자 모두 통제와 수입의 권한이 사적이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윤태희 2021; Huang 2008). 한편, 비공유제 경제의 용어는 기존 공유경제에 대비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黃語東 2018), ‘민영’이라는 용어는 비공유제 경제의 ‘비공(非公)’이라는 단어 속 비(非)가 내포하는 부정적인 정치적 지향성이나 제도적 사전규정에서 벗어나, 폄하의 의미가 아닌 긍정적 의미에서의 정책적 지향성과 제도적 사전규정을 암시한다. 또한 ‘민영기업’이라는 단어는 시진핑 시기 최초로 당대회의 보고에서 최초로 등장하게 되었는데(劉迎秋 2018), 민영경제의 주체는 개체공상호와 사영기업 등으로 구성되며, 개체공상호와 사영기업은 통칭하여 ‘민영기업’으로 지칭될 수 있다(王喆 2021). 본문은 시진핑 시기 비공유제 경제, 민영경제, 민영기업 등과 관련된 정책은 사영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하고 검토하고자 한다. 한편, ‘비공유제 경제인사(非公有制經濟人士)’는 통일전선 업무의 관점에서 사영기업주(私營企業主)와 개체공상호(個體工商戶)를 지칭한다. 본문은 시진핑 시기 비공유제 경제인사 관련 정책은 사영기업주와 개체공상호 등의 사영분야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헌법>의 전문은 中央政府門戶網站, [http://www.gov.cn/guoqing/2018-03/22/content\\_5276318.htm](http://www.gov.cn/guoqing/2018-03/22/content_5276318.htm). (2021년 7월 20일 검색), 비공유제 경제인사로 사영기업주와 개체공상호에 대해서는 『中國統一戰線新聞網』(2021/05/16).

지역적 사례를 검토해 보았을 때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사영기업가 계층의 성장과 발전에 의한 체제 변화의 가능성이 크게 제시되었고(Lipset 1959; Huntington 1991; Rueschemeyer et al. 1992), 개혁기 중국의 경제성장과 사영기업가 계층의 성장에 의한 정치변화가 기대되었기 때문이다(Gold 1990; Zheng 2004).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선행연구들은 사영분야의 성장과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사회적 공간의 형성에 의해 국가로부터 더 많은 자원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출현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White 1993; Strand 1990), 다른 선행연구들은 국가의 시장으로부터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당국가의 공상련, 기업가협회, 개체노동자협회 등의 대안적 조직체를 통한 정치적 공백의 보완과 사영기업가의 독립적 조직체 형성을 방지하는 국가 조합주의(state corporatism) 관행이 개혁기 중국에 형성되었음을 지적하였다(Unger & Chan 1995; Unger 1996).

한편으로, 개혁기 중국의 사영기업가 관련 정책을 검토한 선행연구들은 중국 공산당의 사영분야에 대한 포섭과 영향력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먼저, 공산당의 사영분야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법적 환경의 제공을 들 수 있다(Goodman 1999; Gold 1989). 중국 공산당은 1982년 개체경제(个体經濟)를 ‘사회주의 공유제의 필요한 보충’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하였고, 이어 1987년 사영경제(私營經濟) 또한 ‘공유제 경제의 필요하고 유익한 보충’으로 공인하였다(정종호·윤태희 2016). 한편으로 사영분야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이념적 논란이 발생하였는데, 국가 지도부의 논쟁을 통해 사영분야의 육성과 발전은 다시 강조되었다(Parris 1993). 특히, 1992년 남순 강화 이후 시장경제에 대한 논란은 정리되었으며, 1997년 사영분야의 지위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 구성요소’로 격상되었다(Parris 1999). 더 나아가 중국 공산당은 2007년 <소유권법(物權法)>을 통해 사유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강화하는 등 사영분야가 중국의 경제와 사회의 중요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Wright 2010; Chen & Dickson 2010).<sup>2)</sup>

2) 이러한 국가의 정책적 지지 속에서 2012년까지 중국의 사영분야는 사영기업 1,086만 개, 전체 취업인 수는 1억 1,296만 명으로 급증하게 되었으며, 개체호의 수는 4,059만 개, 전체 취업인 수는 8,628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國家統計局, <http://www.stats.gov.cn/tjsj/ndsj/2013/indexch.htm>. (2021년 7월 2일 검색)

또한, 선행연구들은 공산당의 사영기업가에 대한 적극적 포섭과 입당의 공식 허용을 통한 당내 입지의 강화를 지적하였다(Holbig 2002; Solinger 2006).<sup>3)</sup> 2002년 16차 당대회를 통해 중국 공산당은 개체호, 사영기업주 등의 집단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의 건설자로 선언하는 한편,<sup>4)</sup> 사회 계층의 선진분자로서 사영기업가의 입당을 용인하였다.<sup>5)</sup> 그에 따라 많은 기업가들은 입당을 통해 당원 신분을 확보하여 기업의 발전에 필요한 대출 확보 등의 다양한 활동을 더욱 수월하게 전개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Li et al. 2008), 지방 정치에 참여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에서 입지를 강화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項飏 2017; 윤태희 2021).

마지막으로, 선행연구들은 공산당의 사영분야 당조직 건설과 사영분야로의 직접적 영향력 침투를 강조하였다. 삼개대표를 통해 사영기업가들의 입당이 공식화된 이후 공산당은 일련의 법과 규범에 대한 제정을 통해 사영기업 및 기업들이 밀집된 상업구 등에 당조직을 설립하여 사영분야에 대한 영향력의 확대를 추진하였다(Thornton 2012; Han 2015; Yan & Huang 2017).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국가-사영기업가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공산당 주도의 사영분야 포섭의 정책 속에서 사영기업가들이 사업체의 안정적 경영과 이미지 개선(Jeong & Yoon 2020), 국가 제도의 교묘한 활용과 이익의 확보 등의 성향을 보였으며(Yoon & Jeong 2018), 사회적 신분 상승과 정치적 자본 축적을 추구하는 일면을 보여주었음을 강조한다(Heberer & Schubert 2019). 이처럼 개혁개방 이래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질적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사영분야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제도와 정당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개혁기 사영기업가 집단이 일당지배체제를 옹호하고, 국가에 의존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 3) 2000년 당시 최고 지도자인 장쩌민은 중국 공산당이 선진 생산력의 발전 요구, 선진 문화의 전진 방향, 가장 광범위한 인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하는 집단임을 천명하는 ‘삼개대표(三个代表)’를 최초로 제기하였는데, 삼개대표는 2002년 당헌에 삽입되어 사영기업가의 입당에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BBC 中文网』 2010/06/28). 人民网, <http://cpc.people.com.cn/GB/85037/8405407.html>. (2021년 8월 2일 검색); 人民网, <http://cpc.people.com.cn/GB/64156/64157/4418474.html>. (2021년 8월 2일 검색)
- 4) 中央政府门户网站, [http://www.gov.cn/test/2008-08/01/content\\_1061490\\_3.htm](http://www.gov.cn/test/2008-08/01/content_1061490_3.htm). (2021년 8월 2일 검색)
- 5) 人民网, <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64569/65444/4429114.html>. (2021년 8월 2일 검색).

(Chen 2002; Dickson 2010).

한편으로, 최근의 선행연구는 시진핑 시기 정책의 변화가 사영분야의 발전에 미치는 어려움에 주목한다(Hou 2019).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들은 시진핑 시기 중앙 당국이 국가 통제 하에 사영분야 종속을 추구하며, 사영기업가에 대한 충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한다(Schubert & Heberer 2021). 즉 시진핑 시기 국가는 자금의 공여를 통해 사영분야에 대한 감시와 영향력 확보를 추구하고 있으며(Chen & Rithmire 2020), 국가 주도의 경제 생태계 형성, 국유와 민영 등 모든 분야에 대한 공산당의 경제적 역할 강화, 정치 지도와 통제 아래 시장 기제를 운용하는 정치시장경제 체제 형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Blanchette 2020). 이처럼, 시진핑 시기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감시의 강화, 당국가의 기업 거버넌스 참여 확대 등 공산당 영도 하의 강력한 경제 질서 건설이 강조되고 있는데(Grünberg 2021), 피어슨 등의 경우, 당국가의 시장 잠식, 국유분야와 사영분야의 이익과 기능 혼재, 해외 자본과 상호작용의 정치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당국가 자본주의(Party-State Capitalism)’가 시진핑 시기 출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Pearson et al. 2020). 다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시진핑 시기 다양하게 추진된 사영분야에 대한 육성과 지위 개선(夏雨菲·高茂森 2018; 卿定文·程娜 2020), 통일전선 업무를 통한 기업가들의 정치적 포섭(王建均 2021; 宮秀芬·魏亞男 2019), 정부 권력과 기업 자본 간의 관계 재조정을 의미하는 ‘신형 정상관계(新型政商關係)’의 제시(楊衛敏 2016; 侯遠長 2017) 등 시진핑 시기 나타나고 있는 국가-사영기업가 관계의 동학 변화를 간과하기 쉽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시진핑 시기 국가-사영기업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변화와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문에서는 시진핑 시기 중국 공산당의 사영분야 정책의 주요 내용, 특징과 난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진핑 시기 사영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문은 아래와 같은 연구 질문을 제시한다. 첫째, 시진핑 시기 중앙 당국의 사영분야 관련 정책은 무엇이며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둘째, 시진핑 시기 전개된 사영분야 관련 정책들이 미친 영향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가? 셋째, 일련의 결과물을 검토하여 볼 때, 시진핑 시기 추진된 다양한 정책들은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어떠한 과제를 가지게 되었는가?

이를 통해 본문에서는 이하의 내용을 주장한다. 시진핑 시기 국가의 사영분야 관련 정책은 지속적인 사영분야 육성과 발전의 지지, 사영분야 당조직 건설, 통일전선 업무를 통한 젊은 세대 사영기업가의 포섭, 신형 정상관계를 통한 국가-사영기업가 관계의 재조정 등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그에 따라 시진핑 시기 사영분야의 양적 성장, 당조직을 통한 영향력 확대, 젊은 사영기업가들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중국몽에 대한 동조, 정부 당국과 기업가 간의 새로운 유형의 상호 교류 등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렇지만 신형 정상관계 제시 이후 정부관료의 보신주의와 그에 따른 기업가의 불만, 사영분야를 위한 대출원의 확보, 미중 무역갈등 및 COVID-19 등의 문제는 사영분야 관련 정책에서 고민이 필요한 과제로 제시될 수 있다.

## II. 시진핑 시기 사영분야 주요 정책과 흐름

개혁개방이 진행됨과 동시에 중국은 빠르게 경제적으로 성장하였다. 1978년 중국의 국내 총생산(GDP)은 3,679억 위안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에는 101조 5,986억 위안에 이르게 되어 최초로 100조 위안을 달성하게 되었으며,<sup>6)</sup> 중국의 GDP 규모 역시 1990년 전 세계의 1.6%에서 2020년 16%로 성장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李國強·李初 2021). 이 과정에서 사영분야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는데, 단적으로 국가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은 사영분야가 중국 경제의 50% 이상의 세입, 60% 이상의 국내총생산, 70% 이상의 기술혁신, 80% 이상의 도시 일자리, 90% 이상의 기업 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중국 경제에서 사영분야가 차지하는 위상을 설명하였다.<sup>7)</sup>

이처럼 사영분야의 중요성은 당국이 최고 지도자로부터 공인되었으며, 공산당의 사영분야에 대한 격려와 정치, 경제적 지위 개선의 방침 또한 지속되

6) 中央政府門戶網站, [http://www.gov.cn/shuju/2021-01/19/content\\_5580906.htm](http://www.gov.cn/shuju/2021-01/19/content_5580906.htm). (2021년 7월 1일 검색)

7) 中央政府門戶網站, [http://www.gov.cn/xinwen/2018-11/01/content\\_5336616.htm](http://www.gov.cn/xinwen/2018-11/01/content_5336616.htm). (2021년 7월 2일 검색)

었다. 이는 18차 당대회 및 19차 당대회를 통해 반복적으로 제시된 공산당 지도부의 ‘흔들림 없는 격려, 지지, 인도’의 방침과 국가 지도자 시진핑의 사영분야에 대한 지지 발언, 19차 당대회 보고에서의 ‘민영기업’ 최초 언급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2012년 11월 중국 공산당은 18차 당대회를 통해 ‘비공유제 경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격려, 지지, 인도’의 방침과 ‘각종 소유제 경제의 법에 의거한 생산요소 평등 사용의 보장, 공평한 시장 경쟁 참여, 동등한 법률 보호’를 명시하였으며,<sup>8)</sup> 2013년 18기 3중전회(十八屆三中全會)를 통해서는 ‘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경제 모두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 구성 부분’임을 최초로 인정하였다(劉迎秋 2018).<sup>9)</sup> 더 나아가 중국 공산당은 2017년 11월의 19차 당대회를 통해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격려, 지지, 인도’의 방침을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기본방침(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思想和基本方略)의 항목에 삽입하여 사영분야의 육성과 지지가 당과 국가의 중요한 방침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천명하였다(謝富勝·王松 2021).<sup>10)</sup>

또한, 국가 지도자인 시진핑은 사영분야 퇴출에 관한 여러 논란을 일축하고, 사영분야의 지지와 격려의 방침이 불변한 것임을 재차 강조하여 기업가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18년 1월 인민대학교 맑스주의 학원의 저우신청(周新城) 교수는 “공산주의자는 자신의 이론을 한마디로 개괄할 수 있다: 사유제의 소멸(共產黨人可以把自己的理論概括爲一句話: 消滅私有制)”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유제의 소멸과 공유제의 건설은 공산주의자가 잊어서는 안 되는 초심이며, 공산주의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명’이라는 사유제 소멸론을 주장하여 큰 논란을 야기하였고(『新浪網』 2018/01/14), 2018년 9월 우샤오핑(吳小平)은 ‘사영경제는 공유경제 발전의 협력을 완수하였으며, 점차 퇴출되어야 한다’는 사영경제 퇴출론(私營經濟离场論)을 주장하여 『경제일보(經濟日報)』, 『중화공상시보(中華工商時報)』, 『인민일보(人民日報)』 등의 주요 언론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

8) 中央政府門戶網站, [http://www.gov.cn/ldhd/2012-11/17/content\\_2268826\\_3.htm](http://www.gov.cn/ldhd/2012-11/17/content_2268826_3.htm) (2021년 7월 2일 검색)

9) 中央政府門戶網站, [http://www.gov.cn/jrzq/2013-11/15/content\\_2528179.htm](http://www.gov.cn/jrzq/2013-11/15/content_2528179.htm) (2021년 7월 2일 검색)

10) 中央政府門戶網站, [http://www.gov.cn/zhuanti/2017-10/27/content\\_5234876.htm](http://www.gov.cn/zhuanti/2017-10/27/content_5234876.htm) (2021년 7월 2일 검색)

다(洪功翔 2020; 『新華網』 2018/09/15; 『新浪網』 2018/11/04). 같은 시기인 2018년 9월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 부부장(副部長) 추샤오핑(邱小平)은 ‘민영기업 민주관리 심화, 혁신발전 내부 동력 강화 현장회의(深化民營企業民主管理, 增強創新發展內生動力現場會)’에서 ‘민영기업이 직공의 주체적 지위를 견지하고, 직공을 근본으로 삼아, 직공이 민주적 권리를 향유하고, 기업 관리에 공동으로 참여하며, 기업 발전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것이 ‘당이 직공의 민영기업 공동관리와 민영기업 발전의 이윤을 공유하도록 영도해야 한다’로 와전되어 민영기업에 대한 새로운 ‘공사합영(公私合營)’의 논란을 야기하였다(『搜狐網』 2018/09/19; 『鳳凰周刊』 2018/11/05; 『人民網』 2019/11/29).

이러한 상황에서 시진핑은 2018년 11월 민영기업 좌담회(民營企業座談會)를 통해 사영분야에 대한 당국가의 방침이 변화하지 않았음을 역설하였다. 시진핑은 ‘민영경제 퇴출론’, 당조직과 공회를 통한 민영기업 통제 강화 등의 표현은 잘못된 것이며 당의 국정방침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를 부정하였다.<sup>11)</sup> 또한, 시진핑은 비공유제 경제가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에서의 지위와 역할이 변화하지 않았으며, 공산당의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격려, 지지, 인도 방침이 변화하지 않았으며, 비공유제 발전을 위한 양호한 환경 조성보다 더 많은 기회 제공의 방침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12)</sup> 더 나아가 시진핑은 민영기업과 민영기업가를 ‘우리 편(我們自己人)’으로 호칭하고, 기업가들이 안심하고 발전을 추구할 것을 당부하였다.<sup>13)</sup>

11) 이러한 사회 내부의 사영분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여론에 대하여 시진핑은 일찍이 2015년 5월 중앙 통일전선 공작 회의(中央統戰工作會議)에서 ‘일부 사람들이 비공유제 경제인사를 사회 재산의 갈취자, 빈부 격차의 제조자라고 간주하고, 못마땅하게 보는 것은 중국의 기본경제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여 당의 국정 노선과 부합하지 않은 것임을 언명하였다(王可園 2021; 張峰 2018). 中國農工民主黨, <http://www.ngd.org.cn/jczt/2019bwcx/2019xxzl/65099.htm>. (2021년 7월 2일 검색)

12) 이러한 세 가지 불변(沒有變)의 입장에 대한 시진핑의 언급은 2016년 3월 전국정협 12기 4차회의(全國政協十二屆四次會議) 민주건국회, 공상련 위원의 연합회의(民建, 工商聯界委員聯組會)에서 이미 이루어진 바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진핑의 사영분야 지지와 발전에 대한 발언은 일관성을 가지고 되풀이되었다고 볼 수 있다. 中央政府門戶網站, [http://www.gov.cn/xinwen/2016-03/09/content\\_5051083.htm](http://www.gov.cn/xinwen/2016-03/09/content_5051083.htm). (2021년 7월 2일 검색)



한편으로 민영기업 호칭의 당대회 보고에서 최초 언급, 민영경제와 민영경제인사에 대한 중요성의 문건 명시 등을 통해 시진핑 시기 당국의 사영분야에 대한 의지가 재천명되었다. 구체적으로 19차 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민영기업(民營企業)의 발전을 지지하고 다양한 시장 주체의 활력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언급하여 민영기업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당대회 보고에 삽입하였는데, 이는 민영기업의 가치에 대한 인정을 의미하였다(『搜狐网』 2017/10/22). 더 나아가 2020년 9월 <신시대 민영경제 통일전선 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關於加強新時代民營經濟統戰工作的意見)>에서 민영경제는 ‘중국 경제체제의 내재적 요소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견지와 발전의 중요 경제 기초’로, 민영경제인사는 ‘우리편으로 당의 장기 집정을 위해 단결하고 의존해야 할 중요한 역량’으로 최초로 문건에 언급되었다. 이처럼 시진핑 시기 사영분야와 사영기업가가 정치와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당대회 보고 및 주요 문건 등을 통해 명시되었고, 이를 당의 영도 하에 이끌어 가려는 공산당 지도부의 의지 또한 강조되었다(肖文 2021).<sup>14)</sup>

둘째, 시진핑 시기 중국 공산당의 사영분야에 대한 체제 내 포섭은 지속되었다. 먼저, 사영분야에 대한 당조직 건설의 방침이 강조되었다.<sup>15)</sup> 2012년 3

13) 中央政府門戶網站, [http://www.gov.cn/xinwen/2018-11/01/content\\_5336616.htm](http://www.gov.cn/xinwen/2018-11/01/content_5336616.htm). (2021년 7월 2일 검색)

14) 한편으로 시진핑 시기 사영분야의 발전과 성장을 추동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2014년 11월 국무원은 <중점영역에서의 투자와 금융 기재 혁신과 사회 투자 격려의 지도에 관한 의견(關於創新重點領域投融資機制鼓勵社會投資的指導意見)>을 통해 공공서비스, 자원 환경, 생태건설, 인프라 건설 등 중점영역에서의 투자금융 기재의 혁신과 사회자본, 특히 민간자본의 적극적 역할 발휘 격려의 방침을 천명하였고, 2016년 10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민간 투자의 건강 발전 촉진의 몇 가지 정책적 조치(促進民間投資健康發展若干政策措施)>를 통해 민간 투자의 발전을 제약하는 난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 성장 촉진, 금융 서비스 개선, 재정과 세수 정책의 개선, 기업의 원가 절감, 종합관리 서비스 개선, 관련 법규의 제정과 수정 등 6개 방면의 26가지 구체적 조치를 제시하였다. 또한, 2019년 12월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민영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지지하기 위한 더 나은 발전 환경 조성에 관한 의견(關於營造更好發展環境支持民營企業改革發展的意見)>을 발표하여 공평한 경쟁을 위한 시장환경 개선, 효과적인 정책 환경의 완비, 평등 보호의 법제 환경 설립, 민영기업의 혁신개혁 격려와 인도 등의 방침을 천명하였다. 中央政府門戶網站,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4-11/26/content\\_9260.htm](http://www.gov.cn/zhengce/content/2014-11/26/content_9260.htm). (2021년 11월 2일 검색); 中央政府門戶網站, [http://www.gov.cn/xinwen/2016-10/13/content\\_5118440.htm](http://www.gov.cn/xinwen/2016-10/13/content_5118440.htm). (2021년 7월 2일 검색); 中央政府門戶網站, [http://www.gov.cn/zhengce/2019-12/22/content\\_5463137.htm](http://www.gov.cn/zhengce/2019-12/22/content_5463137.htm). (2021년 7월 2일 검색)

월 당시 국가 부주석이었던 시진핑은 전국 비공유제 기업 당건설 업무 회의(全國非公有制企業黨的建設工作會議)에서 비공유제 기업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의 중요한 역량이며, 비공유제 기업의 수와 역할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의해 비공유제 기업의 당조직 건설 업무가 전체 당조직 건설 업무 중에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갈수록 중요하게 되었음을 역설하면서 사영분야 당조직 건설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sup>16)</sup> 이러한 맥락에서 중공중앙은 2012년 5월 <비공유제 기업 당건설 업무의 강화와 개선에 관한 의견(시행)(關於加強和改進非公有制企業黨的建設工作的意見(試行))>을 통하여 사영분야 당조직을 기업 내 당의 전투보루로 선언하는 동시에, 기업 직공 군중 사이에서 정치적 핵심의 역할 수행과 기업의 발전에서 정치적 지도의 역할 수행을 기능으로 제시하였다.<sup>17)</sup> 이러한 사영분야 당조직 건설의 방침은 2012년 18차 당대회를 통해 ‘비공유제 경제조직, 사회조직의 당조직 건설 업무 역량 강화’로 되풀이되었고,<sup>18)</sup>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도 ‘산업 노동자, 청년 농민, 고지식 집단 내부와 비공유제 경제조직, 사회조직 내부에서의 당원 충원 중시’로 명시되어 우수한 사영기업가에 대한 체제 내 포섭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sup>19)</sup>

15) 中央政府門戶網站, [http://www.gov.cn/dhd/2012-03/21/content\\_2096653.htm](http://www.gov.cn/dhd/2012-03/21/content_2096653.htm). (2021년 7월 2일 검색) 개혁개방이 지속되고 사영분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차원에서의 사영분야 당조직 건설은 비교적 늦게 전개되었다. 그 결과 1999년 말까지 전국의 사영기업 중 당조직이 건설된 기업은 전체의 1.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00년 2월 장쩌민이 사영기업가의 입당을 공식화 한 ‘삼개대표’ 중요 사상을 최초로 언급한 이후, 사영분야 당조직 건설 역시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중국 공산당은 2000년 9월 <개체와 사영 등 비공유제 경제 중 당의 건설 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시행)(關於在個體和私營等非公有制經濟組織中加強黨的建設工作的意見(試行))>을 통해 사영분야 당조직 건설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2002년 16차 당대회를 통해 사영분야 당조직의 책임과 의무를 당헌에 삽입하여 사영분야 당조직 건설 방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2006년 <기업법(公司法)>을 통해 기업 내 당조직 건설을 의무화하는 등 시진핑 시기 이전까지 사영분야 당조직 건설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정종호·윤희태 2016; 孫支南·韋浩亮 2016).

16) 中央政府門戶網站, [http://www.gov.cn/dhd/2012-03/21/content\\_2096653.htm](http://www.gov.cn/dhd/2012-03/21/content_2096653.htm). (2021년 7월 2일 검색)

17) 國家市場監督管理總局, [http://www.samr.gov.cn/djzcj/scdjgz/wjfg/201902/t20190215\\_281570.html](http://www.samr.gov.cn/djzcj/scdjgz/wjfg/201902/t20190215_281570.html). (2021년 7월 2일 검색)

18) 中央政府門戶網站, [http://www.gov.cn/dhd/2012-11/17/content\\_2268826\\_7.htm](http://www.gov.cn/dhd/2012-11/17/content_2268826_7.htm). (2021년 7월 2일 검색)

19) 中央政府門戶網站, [http://www.gov.cn/zhuanti/2017-10/27/content\\_5234876.htm](http://www.gov.cn/zhuanti/2017-10/27/content_5234876.htm).

한편으로 통일전선(統一戰線) 관련 업무를 통한 젊은 세대 사영기업가에 대한 애국주의적 포섭과 사상교육이 강조되었다.<sup>20)</sup> 2015년 시진핑은 통일전선 업무(統戰工作)에서 비공유제 경제의 건강한 발전의 전제는 비공유제 경제인사의 건강한 성장임을 강조하며 사영분야에 대한 정치적 포섭이 가지는 중요성을 역설하였는데(楊娟 2021), ‘비공유제 경제인사 중 특히 젊은 세대’를 반드시 포섭해야 하는 중점 단결대상(重點團結對象) 중 하나로 지목하였다(『新浪网』 2015/05/21).<sup>21)</sup> 이러한 맥락에서 2015년 중국 공산당은 통일전선 업무 관련 최초의 당내 법규인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업무조례(시행)(中國共產黨統一戰線工作條例(試行))>을 통해 비공유제 경제 인사에 대한 이상 신념 교육의 전개, 의법 성실 경영의 인도, 정치참여의 통로 개선, 공익 사업과 사회적 책임 이행의 인도 등을 통해 비공유제 경제인사를 적합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의 건설자로 만들 것을 천명하였다(束贊 2021; 『中國共產黨新聞网』 2015/09/23). 한편으로, 2017년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기업가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및 우수한 기업가 정신의 발양을 통한 진일보한 기업가의 역할 발휘에 관한 의견(關於營造企業家健康成長環境弘揚優秀企業家精神更好發揮企業家作用的意見)>을 발표하였는데,<sup>22)</sup> 이를 통해 기

(2021년 7월 2일 검색)

- 20)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업무 조례(中國共產黨統一戰線工作條例)>에 따르면 통일전선이란 공산당 영도와 노동자와 농민의 연맹을 기반으로, 전체 사회주의 노동자와 사회주의 사업 건설자를 포함하는 조국 통일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전력을 다하는 애국자들의 연맹을 지칭한다. 中央政府門戶网站, [http://www.gov.cn/zhengce/2021-01/05/content\\_5577289.htm](http://www.gov.cn/zhengce/2021-01/05/content_5577289.htm). (2021년 8월 2일 검색)
- 21) 이에 대한 배경은 크게 두 가지 때문으로 풀이된다. 먼저, 민영기업의 세대교체 문제가 있었다. 개혁개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많은 민영기업은 세대교체의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민영기업의 85% 이상은 가족기업이며, 향후 5-10년 사이 약 75%의 가족기업이 세대교체 문제를 직면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매년 창업하는 당해 졸업자 수가 10여만 명, 해외 유학파의 귀국 창업자 수가 2-3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따라서, 민영기업 차세대 기업주 및 청년 창업세대 등의 젊은 세대 비공유제 경제인사에 대한 포섭은 공산당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다(劉在華 2017). 둘째, 왕쓰충(王思聰) 등 일부 젊은 세대 민영기업가의 잘못된 행실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통전부는 재벌 2세(富二代)와 젊은 세대 기업가에 대한 규범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젊은 세대 민영기업가에 대한 적극적 사상교육은 일종의 ‘기강 잡기’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新浪网』 2015/06/12).
- 22) 해당 문건에서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기업가의 합법적 권익 보호의 법적 환경 조성, 기업가의 공평한 경쟁, 성실 경영 촉진의 시장환경 조성, 기업가의 업무와 창업을

업가 중 특히 젊은 세대 민영기업가들의 이상 신념 및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교육 강화, 우수한 혁명 전통과 형제 정책, 준법 성실의 교육 훈련 전개를 통한 기업가의 국가 사명감 및 민족 자부심 배양, 기업가의 국가 이익, 기업 이익, 직공 이익과 개인 이익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및 개인의 이상과 민족 부흥의 위대한 실천 융합의 인도 등을 명시하여 젊은 세대 민영기업가의 사상교육 강화와 애국주의적 대의를 통한 포섭을 강조하였다.<sup>23)</sup>

더 나아가 2020년 9월 중국 공산당은 <신시대 민영경제 통일전선 업무강화에 관한 의견(關於加強新時代民營經濟統戰工作的意見, 이하 의견)>을 통해 민영경제인사의 시진핑 신시대 사회주의 사상의 정신적 무장과 실천에 대한 교육과 인도, 당중앙과의 정치 입장, 정치 방향, 정치 원칙, 정치 노선에서 높은 수준의 일치 유지, 시종 정치적으로 현명한 인물(政治上的明白人)로 만들기 등 정치적 공감대의 공고와 확대의 방침을 언명하는 한편,<sup>24)</sup> 기성세대 민영기업가들의 경험 전수를 통한 중화민족 전통 미덕의 대대적 고취, 가정(家庭), 가정 교육(家教)과 가풍(家風) 건설의 중시, 젊은 세대의 당의 말을 듣고, 당과 함께 가는 영예로운 전통 계승과 고취의 인도, 사업의 친구교체와 질서 있는 승계의 실현 등 젊은 세대 민영경제인사의 건강한 발전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실행 및 교육의 강화를 명시하였다.<sup>25)</sup> 이차

존중하고 격려하는 사회 분위기의 조성, 기업가의 애국, 직업정신, 준법 준수의 고군분투 정신 발양, 기업가의 혁신발전과 품질 집중, 탁월성 추구의 정신 발양, 기업가의 책임이행과 사회 서비스 담당의 정신 발양, 기업가에 대한 우수하고 효율적인 서비스의 강화, 우수한 기업가의 육성 강화, 당의 기업가 대오 건설의 영도에 대한 강화 등의 방침을 제시하였다. 中央政府門戶網站, [http://www.gov.cn/zhengce/2017-09/25/content\\_5227473.htm](http://www.gov.cn/zhengce/2017-09/25/content_5227473.htm). (2021년 8월 2일 검색)

23) 中央政府門戶網站, [http://www.gov.cn/zhengce/2017-09/25/content\\_5227473.htm](http://www.gov.cn/zhengce/2017-09/25/content_5227473.htm). (2021년 8월 2일 검색)

24) <의견>은 애국주의와 사회주의의 기치 제고, 이상 신념 교육의 심화, 정치적 인도와 가치관 지도 등 민영경제인사의 사상정치 건설을 민영경제 통일전선 업무의 선결 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인선 기제 완비, 대외 구조 개선, 교육 배양 강화, 정치적 안배 규범화, 젊은 세대에 대한 배양 노력 확대 등 자질이 뛰어난 민영경제 대표인사 대외의 건설을 민영경제 통일전선 업무의 관건으로 지적하였다. 中央政府門戶網站, [http://www.gov.cn/zhengce/2020-09/16/content\\_5543717.htm](http://www.gov.cn/zhengce/2020-09/16/content_5543717.htm). (2021년 8월 2일 검색)

25) 中央政府門戶網站, [http://www.gov.cn/zhengce/2020-09/15/content\\_5543685.htm](http://www.gov.cn/zhengce/2020-09/15/content_5543685.htm). (2021년 8월 2일 검색) 그 외에도, 중국 공산당은 2020년 12월 <통일전선업무조례(統一戰線工作條例)>를 통해서 비공유제 경제 영역에서 신임, 단결, 서비스, 인도,

럼 시진핑 시기 중국 공산당은 통일전선 업무를 통해 사영분야 관련 종사자들의 애국주의적 포섭과 정치적 신념 강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을 제시하였고, 젊은 세대 사영분야 종사자들을 포섭의 중점대상으로 지목하여 이에 대한 교육과 인도를 강조하였다.

셋째, 정부-기업가 관계(政商關係)에 대한 재조정의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배경에는 시진핑 시기 전개된 강도 높은 반부패 정책과도 연관이 있다(張國清 外 2016). 2021년 6월 중앙기율위원회 및 국가감찰위원회(中央紀委國家監委)의 자료에 따르면, 18차 당대회 이후 전국의 기율 검사 감찰 기관(紀檢監察機關)의 입안 건수는 380.5만 건, 조사 및 처분자 수 408.9만 명, 당기 정무 처분(黨紀政務處分)을 받은 자의 수는 374.2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sup>26)</sup> 많은 부패안건에서 정부와 기업가 간의 결탁과 이익 공유의 문제가 노출되었으며, 건강한 정부-기업가 관계의 수립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鄭尙植·趙雪 2020). 이러한 맥락에서 시진핑은 집권 초기인 2013년 3월 양회 기간 정부 관료(官)와 기업가(商) 간의 교류에서 상호 존중, 개인적 결탁의 엄금 및 공사 구분의 명확성을 강조하였으며(『中國共產黨新聞網』 2015/03/27), 2014년에는 <관공청 업무에서 ‘다섯 가지 견지’를 이루어야 한다(辦公廳工作要做到“五个堅持”)>를 발표하여 ‘간부가 되었으면 부를 축적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고, 부를 축적할 생각이 있으면 간부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관료의 권력과 기업가의 자본 간 결탁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다(習近平 2014).

시진핑의 정부-기업가 관계의 재조정 시도는 2016년 3월 친밀하고(親) 청렴한(淸) ‘신형 정상관계’의 제시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즉, 시진핑은 ‘신형 정상관계’를 ‘친밀함(親)’과 ‘청렴함(淸)’의 두 단어를 통해 개괄적으로 설명

교육 방침의 전면적 관철, 친밀하고 청렴한 정상관계 수립, 공유제의 건강한 발전과 비공유제 경제 인사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의 방침을 강조하는 한편, 당중앙 이하 지방 당위원회에 설립된 통전부(統戰部)의 사영분야 경제발전 정책 제정과 실행에 대한 참여와 비공유제 경제 인사에 대한 통일전선 업무의 통합적 전개를 명시하여 사영분야에 대한 통일전선의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였다(楊東 2021; 『新華網』 2021/01/05). 中央政府門戶網站, [http://www.gov.cn/zhengce/2021-01/05/content\\_5577289.htm](http://www.gov.cn/zhengce/2021-01/05/content_5577289.htm). (2021년 8월 2일 검색)

26) 中央紀委國家監委網站, [https://www.ccdi.gov.cn/100year/202106/t20210629\\_245048.html](https://www.ccdi.gov.cn/100year/202106/t20210629_245048.html). (2021년 7월 19일 검색)

하였는데(姚炳宇 2020; 聶勇鋼 2021), 이를 통해 정부 관료와 기업가 간의 상호작용의 원칙을 재정립하고자 한 것이었다. 지도자 간부에게 있어 ‘친밀함’은 민영기업과의 성심성의를 갖춘 적극적 교류를 의미하는데, 특히 민영기업이 직면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하며, 비공유제 경제인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소통 및 인도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도와야 함을 의미하였으며, ‘청렴함’은 민영기업가와의 관계에서 청렴결백함을 유지하며, 권력을 통한 사익의 도모나 권력과 자본 간의 거래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칭하였다. 한편으로, 민영기업가에게 ‘친밀함’은 각급 당위원회 및 정부 부처와의 적극적 교류와 솔직한 소통과 간언을 통한 지방 발전의 적극 지지를 의미하였으며, ‘청렴함’은 기업 운영의 규율 준수와 떳떳한 기업 경영을 의미하였다.<sup>27)</sup> 이러한 신형 정상관계는 2017년 19차 당대회를 통해서 ‘친밀하고 청렴한 신형 정상관계의 구성’으로 재천명되었으며,<sup>28)</sup> 2019년 10월의 19기 4중전회(十九屆四中全會)에서는 ‘친밀하고 청렴한 정상관계 정책 체계의 구성 완비’로 명시되어 신형 정상관계를 통한 정부-기업가 간의 관계 조정이 시진핑 시기 매우 중요하게 추진되는 정책임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sup>29)</sup>

요컨대, 시진핑 시기 국가-사영기업가 관계에 영향을 준 사영분야 관련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면 이하의 흐름이 전개된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사영분야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지지의 방침은 지속되었다. 이는 지속적으로 되풀이된 사영분야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격려, 지지, 인도의 방침과 사영분야의 퇴출의 논란에 대한 시진핑의 대응, 민영경제와 민영경제인사에 대한 중

27) 한편으로 시진핑은 18차 당대회 이래 전개되고 있는 공산당의 강도 높은 반부패 투쟁을 강조하면서, 일부 부패 사건에서 민영기업가들이 관계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시진핑은 일부 간부들의 주도적인 뇌물 요구 사례 및 기업 경영자의 주도적인 뇌물 제공의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간부들의 주도적인 뇌물 요구에 대해서는 단속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언급하는 동시에, 기업가들의 주도적인 뇌물 제공 또한 경계로 삼아야 하며, 이러한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였다. 中央政府門戶網站, [http://www.gov.cn/xinwen/2016-03/09/content\\_5051083.htm](http://www.gov.cn/xinwen/2016-03/09/content_5051083.htm). (2021년 7월 2일 검색)

28) 中央政府門戶網站, [http://www.gov.cn/zhuanti/2017-10/27/content\\_5234876.htm](http://www.gov.cn/zhuanti/2017-10/27/content_5234876.htm). (2021년 7월 2일 검색)

29) 中央政府門戶網站, [http://www.gov.cn/zhengce/2019-11/05/content\\_5449023.htm](http://www.gov.cn/zhengce/2019-11/05/content_5449023.htm). (2021년 7월 19일 검색)

요성의 문건 내 명시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영분야에 대한 체제 내의 포섭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시진핑 시기 중국 공산당은 사영분야에 대한 당조직 건설을 강조하고 있으며, 통일전선을 통한 젊은 세대 사영기업가의 포섭과 정치적 신념 강화를 추진하였다. 셋째, 시진핑 시기 신형 정상관계의 제시를 통한 국가-사영기업가 관계의 재조정 시도가 이루어졌다. 강도 높은 반부패 정책의 맥락 속에서 정부 관료와 민영기업가는 ‘친밀함’과 ‘청렴함’을 원칙으로 상호 교류할 것이 요구되었으며, 이러한 신형 정상관계는 시진핑 시기 매우 중요하게 추진되었다.

### Ⅲ. 시진핑 시기 사영분야 관련 정책: 주요 특징과 난점

이처럼 시진핑 시기 중국 공산당의 사영분야 육성과 사영기업가의 건강한 발전의 촉진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었다. 그 결과, 사영분야는 양적인 측면에서 증가하였다. 2019년 현재 중국 사영기업의 수는 3,516만 개, 취업인 수는 2억 2,833만 명으로 성장하였고, 개체호의 수 또한 8,210만 개, 취업인 수 또한 1억 7,691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sup>30)</sup> 이는 2012년 대비 사영기업 2,430만 개, 취업인 1억 1,537만 명의 증가와 개체호 4,151만 개 및 취업인 9,063만 명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특히, 2019년 현재 도시 지역의 사영기업 취업인 수는 1억 4,567만 명, 개체호 취업인 수는 1억 1,692만 명에 달하였다. 그에 따라, 시진핑 시기 사영분야는 앞에서 시진핑의 발언 등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중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80% 이상의 도시 일자리와 90%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는 취업의 주력군으로 자리매김하였다(『人民网』 2021/08/31).

사영분야에 대한 포섭의 노력 또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사영분야에 대한 당조직의 양적 증가가 이루어졌다. 중국 공산당은 2018년 말

30) 國家統計局, <http://www.stats.gov.cn/tjsj/ndsj/2020/indexch.htm>. (2021년 7월 2일 검색)

까지 158.5만 개의 사영분야 기업 법인단위에 당조직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2012년 대비 약 11만 개의 당조직이 증가한 수치였다(張月·劉興平 2020; 『中國共產黨新聞網』 2019/07/01). 또한, 중국 공산당은 전국의 2,540여 개 성급 이상의 경제개발구, 첨단기술 산업구, 자유무역구 등 각종 원구(園區)에 ‘원구 당공작위원회(園區黨工委)-비공유제 기업 종합 당위원회(非公企業綜合黨委)-당조직 건설 업무지도 스테이션(黨建工作指導站)-비공유제 기업 당조직(非公企業黨組織)’의 4단계 업무 체계를 수립하여 원구의 50명 이상 기업에서의 당원 확보, 100명 이상 기업에서의 당조직 건설과 500대 민영기업의 당조직 전면 도달 등을 실현하였다(『人民網』 2021/06/10). 이러한 당조직의 양적 증가와 당조직의 영향력 확대는 시진핑 시기 사영분야에 대한 적극적 포섭의 지속을 단적으로 시사하였다.

또한, 여러 설문조사들은 젊은 사영기업가들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중국몽(中國夢)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후난(湖南) 지방의 젊은 세대 비공유제 경제인사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의 주창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李桂梅·鄭自立 2017), 안후이성(安徽省)의 설문조사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에 동조하는 젊은 세대 비공유제 경제인사는 90.1%에 이르렀다(夏紅莉 외 2019). 또한, 산시성(陝西省)의 설문조사에서도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으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발전시킬 수 있다’에 동의하는 피응답자 젊은 세대 비공유제 경제인사는 85%에 달하였다(王曉璉·何虹 2017). 그 외, 윈난성 위시시(玉溪市)의 설문조사에서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견지와 발전’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하는 젊은 세대 비공유제 경제인사는 응답자의 92.9%, 자신의 개인적 꿈(個人夢想)이 중국몽의 실현이라는 응답자는 43%, 개인적 꿈이 중국몽의 일부라고 인식한 인사는 89%에 달하였으며(胡偉 2020), 후베이성(湖北省)의 설문조사에서도 자신의 개인적 꿈이 중국몽의 실현이라고 응답한 젊은 세대 비공유제 경제인사는 34.4%, 개인적 꿈을 중국몽의 일부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90.6%에 달하였다(肖建平 2019). 이처럼 중국 국내에서 전개된 여러 설문조사에서 젊은 세대의 사영기업가들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중국몽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통일 전선 업무를 통한 젊은 세대의 사영기업가에 대한 정치적 포섭에 대한 강조



가 영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가-사영기업가 간 상호작용의 재조정을 위한 노력이 발생하였다.<sup>31)</sup> 민영기업에 대한 정부 당국의 직접적 관료 파견을 통한 소통과 서비스 제공이 대표적 현상으로 제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시성(山西省)은 전국 최초로 지도자 간부와 민영기업 간의 연계 제도를 수립하여 성시현(省市縣) 3급의 지도자 간부와 성 직속 부서의 민영기업 지원을 추진하였다. 그에 따라, 2016년 9월 산시성은 14,477명의 간부를 4,580개의 기업에 파견, 2달 동안 집중 기업 상주 서비스 제공의 업무를 수행하여 8,812개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閔曉紅 2017). 또한, 항저우시(杭州市)는 관할구역의 알리바바(阿里巴巴), 지리(吉利), 와하하(娃哈哈) 등 100개 중점 민영기업에 100명의 간부를 파견하여 정부사무대표(政府事務代表)로 상주하게 하여 기업들에게 정보 교류, 정책 소개 및 프로젝트의 추진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하였으며(陳一良 2019; 『浙江在線』 2019/09/20; 『觀察者網』 2019/09/23),<sup>32)</sup> 허난성 허비시(鶴壁市)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민영기업에 간부를 파견하는 서비스 봉사(服務管家) 제도를 통해 169명의 간부를 기업에 파견하여 자금, 전력이용, 환경보호, 직공 고용, 수출 절차 등 358개의 문제에 대한 처리를 지원, 연인원 1만 1,000명에 달하는 기업 직공 관련 문제와 융자금액 22.3억 위안에 달하는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었다(『中國網』 2019/10/21).

더 나아가, 일부 지방에서는 정부 관료의 기업 파견과 기업 핵심인재의 정부 파견이라는 상호파견 현상이 등장하였다. 예를 들어, 저장성 하이닝시

31) 친밀하고 청렴한 신형 정상관계의 형성을 위해 일부 지방정부들은 간부의 민영기업 일대일 지원, 민영기업과의 직접적 교류, 기업 현지 조사, 좌담회 개최 등의 형식으로 민영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영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王德寧 2017; 唐昊 2018; 秦叢叢 2020). 예를 들어, 선양시(沈陽市)의 경우 다양한 민영기업에 관련 정책 정보 제공, 민영기업 투자 증가, 기술혁신의 추동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자, 1만 명의 간부가 1만 개의 기업에 대해 전화, 위챗 등을 통해 1대1로 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활동(萬人進萬企)을 전개하였다(李盼盼·解建秀 2019; 齊洪華·趙艷 2021). 이를 통해 선양시는 2020년 11월까지 10,166명 간부의 11,282개 기업 지원과 현지 방문 16,976회, 시구 양급 기업 좌담회 732회 개최, 기업의 각종 요구사항과 문제 총 3,522개 안전의 해결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新華網』 2020/11/09).

32) 한편으로 이러한 방침에 대해 당국의 기업 활동에 관한 개입의 확대를 우려하는 여론이 야기되었다(CNN Business 2019/09/24).

(海宁市)는 정부 간부의 기업 파견을 통한 기업의 어려움 해소와 기업 핵심 간부의 정부 부처 파견 및 학습활동 전개를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하이닝시는 180여 명의 간부를 기업에 장기 파견하여 당건설 지도, 프로젝트 신고, 주식 개혁 상장, 심사 대행 등 30여 개의 서비스를 전개하였으며, 기업의 핵심인사 22명을 주요 경제 부처에 배치, 관련 정책과 법규의 학습 및 혁신 능력의 제고를 도모하였다(朱建軍 2019). 이처럼, 중앙의 친밀하고 청렴한 신형 정상관계 제시 이후 일부 지방에서 추진된 친밀하고 청렴한 상호파견(親清互掛)은 민영기업 관계자의 관련 정책 학습을 통한 재정 보조 확보 증가, 파견 간부의 협력을 통한 민영기업의 세수와 비용의 감면, 학습을 통한 민영기업 핵심 인재 성장 등의 혜택을 주었으며, 지방정부 입장에서 지역 내 경영 환경의 개선을 통한 민영기업 유치 가능성 증가, 부처 업무 인력 부족의 해소 등의 효과를 제공하였다(鄭春勇·楊乾 2020).<sup>33)</sup>

요컨대, 시진핑 시기 일련의 정책은 사영분야의 양적 성장, 사영분야에 대한 당조직의 양적 증가와 영향력의 확대, 통일전선을 통한 젊은 세대 사영기업가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중국몽에 대한 동조, 신형 정상관계의 제시 이후 국가-사영기업가 간의 상호작용 방식 변화 등의 특징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시진핑 시기 사영분야에 대한 적극적 육성과 정치적 포섭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영기업 활동에서의 어려움 또한 야기되었다. 먼저, 강도 높은 반부패 정책의 맥락 속에서 추진된 신형 정상관계 수립의 노력이 발생시킨 ‘청렴하나 친밀하지 않은(清而不親)’ 현상은 신형 정상관계 수립에서 해결되어야 할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楊衛敏 2019; 劉丹 2021). ‘친밀하고’ ‘청렴한’ 신형 정상관계의 수립에서 ‘청렴함’에 대한 국가의 요구는 왕래 및 접촉의 감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친밀함’에 대한 요구는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고, 업무를 전개하기 어렵다는 난점이 존재하는데(金彥海 2017), 일부 관료들은 기업가와의 관계에서 부패문제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기업가와의 접촉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교류 방식에 혼선을 가지게 되어 기업가와의 소

33) 이러한 친밀하고 청렴한 상호파견은 저장성 하이닝 외에도 하이옌(海鹽), 평후(平湖), 성저우(嵊州) 등의 지역과 광둥성의 후이저우(惠州), 산시성(陝西省)의 시안(西安), 산둥성의 칭다오(靑島) 등 다양한 지방에서 전개되었다.

통에서 어려움이 초래되었던 것이다(中共河南省委統戰部課題組 2019; 江陰市委統戰部江陰市委党校聯合課題組 2017). 이는 정책 및 관련 규정에 대한 기업가의 정보 접근 어려움과 관료에 대한 기업가의 불신, 정부 관료의 복지 부동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기업가의 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된다(丁少英 外 2018; 沈啓旺 2017; 張李娟 2019; 李淑萍·劉長松 2018).

둘째, 국가의 그림자은행 규제 강화와 사영기업 대출 확보의 어려움 문제 또한 극복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그림자은행은 상업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나 감독을 받지 않는 비은행 금융 기관을 지칭한다.<sup>34)</sup> 개혁기 중국의 사영분야는 공식적 대출 경로를 통한 신용대출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余雪飛·宋清華 2013).<sup>35)</sup> 한편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성장한 중국의 그림자은행은 중소형 민영기업 융자 대출의 중요한 채널로 부상하였으나, 국가 감독 체제 외부에 존재하는 그림자은행은 금융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으로 지적되었다(王喆 外 2017; 盧盛榮 外 2019).<sup>36)</sup> 이러한 맥락에서 2016년 말 시진핑은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에서 금융 리스크에 대한 대비와 해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2017년 2월 중앙재경영도소조(中央財經領導小組) 제15차 회의에서는 시장의 혼란에 대한 거버넌스와 위법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를 지적하여 그림자은행에 대한 단속을 전개하였다(『中國金融新聞網』 2020/12/04).<sup>37)</sup> 그 결과 2017년 초 100.4조 위안에 달하던 광의의 그림자은행은 2019년 말 84.8조 위안으로 감소하였고, 협의의 그림자은행 또한 12조 위안이 감소한 39.14조 위안으로 크게 축소되었다(中國銀保監會政策研究局課題組·中國銀保監會統計信息與風險監測部課題組 2020).<sup>38)</sup>

34) 中央政府門戶網站, [http://www.gov.cn/gzdt/2011-01/04/content\\_1778426.htm](http://www.gov.cn/gzdt/2011-01/04/content_1778426.htm). (2021년 9월 13일 검색)

35) 개혁기 중국의 사영분야는 국유은행의 국유분야 지지와 사회안정, 국가의 발전 우선순위, 시장 수준보다 낮은 금리 유지에 대한 압력, 비국유분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조직적, 기술적 한계, 당국가 자원의 자본주의적 창업 투자 지원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이념적, 정치적 민감성 등의 요인에 따라 다양한 비공식적 금융 기제에 의존하여 발전하여 왔다(Tsai 2015; Tsai 2017).

36) 그림자은행은 만기 불일치에 의한 유동성 위험, 신용 부도의 위험, 중앙은행의 화폐 정책에 대한 위험 등의 잠재적 불안요인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張明 2013).

37) 2017년 이후 정부 당국의 그림자은행 관련 정책에 관해서는 廖儒凱·任嘯辰(2019), 李文喆(2021), 肖鋼(2019) 등을 참고.

한편으로, 사영기업들은 은행으로부터의 대출 자금의 확보에 난항을 겪게 되었는데, 2018년 11월 중앙인민은행의 당위원회 서기이자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國銀保監會)의 주석인 귀수칭(郭樹清)에 따르면, 은행의 대출에서 여전히 국유기업이 약 3/4을 차지하고, 민영기업은 1/4을 차지하였다(『新華網』 2018/11/08). 그에 따라 중앙인민은행은 은행의 신규 기업 대출에서 대형 은행의 민영기업 대출이 전체 1/3 이상, 중소은행의 민영기업 대출은 2/3 이상, 3년 이후 은행업계의 민영기업에 대한 대출이 신규 기업 관련 대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는 ‘125’목표(“一二五”目標)를 발표하였다(『新華網』 2018/11/12). 그렇지만, 이에 반하여 은행은 민영기업 대출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사영기업의 대출 상황이 국유기업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며, 대출의 담보가 국유기업보다 더 불충분하기 때문이었다(Schubert & Heberer 2021).<sup>39)</sup> 이처럼, 시진핑 시기 민영기업은 그림자은행 등 비공식적 통로에 대한 규제 강화와 동시에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의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2014년부터 2020년 12월 10일까지 발생한 채무불이행 전체 757건 중 71.2%, 채무불이행 액수 전체의 66.3%를 차지하였다(中銀研究 2020).

셋째, 시진핑 시기 중국 사영분야가 처한 환경의 변화는 민영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2017년 8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법 301조에 기반을 둔 무역대표부의 중국의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등의 영역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2018년 4월에는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선포하였는데, 이에 반발한 중국은 마찬가지로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38)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정책연구국 과제조와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통계정보와 위험 감측 과제조의 연구(中國銀保監會政策研究局課題組·中國銀保監會統計信息與風險監測部課題組 2020)에 따르면, 광의의 그림자은행(廣義影子銀行)은 은행 동업의 특수목적기구, 위탁대출, 자금신탁, 은행 자산관리, 비주식 공모 펀드, 증권업 자산관리, 보험 자산관리, 자산 증권화, 비주식 사모펀드, 온라인 P2P 대출 등을 의미하며, 협의의 그림자은행(狹義影子銀行)은 이들 중 리스크가 더 큰 일부 은행 동업의 특수목적기구, 일부 은행 자산관리(동업 자산관리, 비표준채권, 자산상품 등), 위탁대출, 자금신탁, 비주식 사모펀드, 온라인 P2P 대출 등을 지칭한다.

39) 그 외에도 은행의 민영기업의 거버넌스 구조, 재정관리, 미래전망 등 여러 항목에 대한 불신은 은행의 민영기업에 대한 대출에 의구심을 자아내어 많은 중소 규모 민영기업들의 대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周志華 2018; 沈偉 2019).

부과로 대응하여 미중 간의 무역갈등이 본격화되었다(劉元春 2018).<sup>40)</sup> 이러한 미중 간의 무역갈등은 민영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큰 타격을 주었다(張丁予·張端民 2020). 특히 상품 경쟁력이 약하고 대체성이 강한 기업은 크게 타격을 받았는데, 이는 기업의 공장 운영 중단과 직공 취업 지속 문제를 초래하였다. 또한, 미중 무역갈등은 기업의 원자재 구매 가격 상승을 야기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金正·周睿 2020; 徐英 2020). 이처럼 미중 무역갈등의 여파에 따라 2018년 상반기 전체 3,100만여 개의 등록된 법인 중 약 1/6에 해당하는 약 504만 개의 기업이 파산하고 200만 명의 신규 실업자가 발생하였는데(『조선일보』 2018/11/02), 파산한 500만여 기업 중 대다수는 민영기업인 것으로 보도되었다(『自由亞洲電台』 2019/01/16).

한편으로 2019년 말 발생한 COVID-19 역시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큰 도전이 되었는데, 국유기업보다 민영기업이, 대형기업보다 소형기업이 주문 발주량의 감소, 생산력의 감소, 생산단가 상승, 이윤 감소 등 여러 측면에서 더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지적되었다(中國企業家調查系統 2020; 万建民·郭立琦 2020; 『新華網』 2020/03/28). COVID-19 발생 이후 시장의 위축과 수요의 감소, 생산요소, 상품, 서비스의 유통난과 생산재 및 소비재 순환의 악화 등의 요인은 민영기업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는데(王書柏·胡祿 2021; 程艷 2020; 梁小紅 2021),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리스크 관리능력과 압력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 민영기업은 자금의 압박, 시장의 압력, 비용의 문제, 환경의 압력, 이윤의 압박 등의 측면에서 더 크게 타격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羅茜 2021; 侯立文 2021; 彭建國 2020). 그에 따라 2020년 1/4 분기 동안 영업 취소 혹은 파산한 소형 민영기업은 46만 개에 이르렀으며(庄聰生 2020),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영업 취소 혹은 말소된 개체호, 개체호에서 전환된 기업(個轉企) 등의 시장 주체는 모두 301만 개에 달하였다(『新華網』 2021/03/02).<sup>41)</sup>

이처럼 시진핑 시기 사영분야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반부패

40) 이러한 미중 간의 무역갈등은 미중 양국의 전반적인 경제성장률 하락, 무역량의 감소를 초래하였고,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부진, 위안화 화폐가치의 하락 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CNBC 2020/01/02).

41) 개체호에서 전환된 기업(個轉企)은 개체공상호가 기존의 생산경영 조건을 이용, 법에 의거하여 유한책임공사(有限責任公司), 개인독자기업(個人獨資企業), 파트너십기업(合夥企業) 등 각종 유형으로 재등록한 기업을 의미한다(俞萍 2014; 牛輝 2014).

의 맥락 속에서의 신형 정상관계의 제시는 일부 관료들의 기업가와의 관계에서 대응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만드는 문제를 야기하여 기업가들의 불만을 초래하였으며, 그림자은행 규제 강화 속에서 은행의 소극적인 자금 대출의 태도는 사영기업의 대출원 확보의 난항을 초래하였다. 한편으로 시진핑 시기 전개된 미중 무역갈등과 COVID-19 등의 사태는 사영분야의 생존과 발전에 변수로 작용하였으며, 많은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타격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 IV. 결론

이상으로 본문은 시진핑 시기 공산당의 사영분야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및 난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시진핑 시기 중국 공산당은 사영분야에 대한 인정과 격려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일각에서 제기된 사영분야의 퇴출 논란에도 적극 수습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영분야 당조직을 통한 사영분야에 대한 정치적 침투와 통일전선을 통한 젊은 세대 사영기업가들에 대한 애국주의적 포섭이 추진되었다. 한편으로, 시진핑 시기 강도 높은 반부패의 맥락 속에서 정부-기업가 관계에 관한 재조정이 이루어졌고, 이는 친밀하고 청렴한 신형 정상관계를 통한 정부 관료와 사영기업가 간의 상호 교류의 새로운 원칙의 제시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진핑 시기 사영기업가와의 관계에 관한 정책은 사영분야의 적극적 육성과 체제 내부로의 포섭, 국가-사영기업가 관계의 재조정 등의 특징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

일련의 정책에 의해 사영분야의 양적성장과 당조직을 통한 사영분야 영향력 강화, 통일전선을 통한 젊은 세대 사영기업가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중국몽에 대한 동조 현상, 정부 관료의 사영분야 파견과 정부 관료 및 기업 인재의 상호 파견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상호 교류 방식 등이 시진핑 시기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신형 정상관계의 제시 이후 정부 관료의 보신주의와 그에 대한 사영기업가의 불만, 사영분야 육성을 위한 대출원의 확보, 미중 무역갈등과 COVID-19 등 돌발변수에 대한 대응의 문제 등은 사영분야 관련 정책에서 추후 고민이 필요한 과제로 제시될 수 있다.

## | 참고문헌 |

### 1. 논문 및 단행본

- 윤태희 (2021). 『공산당원이 된 중국 사영기업가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정종호·윤태희 (2016). “중국 공산당의 사영분야 당조직 건설 정책 변화: 지방정책과 중앙정책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5권, 제4호, pp. 133-165.
- 조영남 (2006).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 정치』. 나남.
- \_\_\_\_ (2009). 『21세기 중국이 가는 길』. 나남.
- Blanchette, J. (2020). “From “China Inc.” to “CCP Inc.”: A New Paradigm for Chinese State Capitalism.” *China Leadership Monitor*. No. 66.
- Chen, A. (2002). “Capitalist Development, Entrepreneurial Class and Democratization in China.”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17. No. 3, pp. 401-422.
- Chen, H. and M. Rithmire (2020). “The Rise of Investor State: State Capital in the Chinese Economy.”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 55, pp. 257-277.
- Chen, J. and B. J. Dickson (2010). *Allies of the State: China's Private Entrepreneurs and Democratic Chang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Dickson, B. J. (2003). *Red Capitalists in China: The Party, Private Entrepreneurs, and Prospects for Political Chang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 (2010). “China's Cooperative Capitalists: The Business End of the Middle Class.” Cheng Li (ed.). *China's Emerging Middle Class: Beyond Economic Transformation*.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pp. 291-309.
- Gold, T. (1989). “Urban Private Business in China.”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22. No. 2/3, pp. 187-201.
- \_\_\_\_ (1990). “Resurgence of Civil Society in China.” *Journal of Democracy*. Vol. 1. No. 1, pp. 18-31.
- Goodman, D. S. G. (1999). “The New Middle Class.” Merle Goldman and Roderick MacFarquhar (eds.). *The Paradox of China's Post-Mao Refor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41-261.
- Grünberg, N. (2021). “Party-state capitalism under Xi: aligning the economy with political objectives.” Nis Grünberg and Claudia Wessling (eds.). *The CCP's next century: expanding economic control, digital governance and national security*. Berlin: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pp. 21-35.

- Han, Z. (2015). "Party Building in Urban Business Districts: organizational adaptation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24. No. 94, pp. 644-664.
- Heberer, T. and G. Schubert (2019). "Weapons of the Rich: Strategic Behavior and Collective Action of Private Entrepreneurs in China." *Modern China*. Vol. 45. No. 5, pp. 471-503.
- Holbig, H. (2006). "The Party and Private Entrepreneurs in the PRC." *The Copenhagen Journal of Asia Studies*. Vol. 16, pp. 30-56.
- Hou, Y. (2019). "The Private Sector: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During Xi's Second Term." *China Leadership Monitor*. No. 59.
- Huang, Y. (2008). *Capit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Entrepreneurship and the Stat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ntington, S. P.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Jeong, J.-H. and T. Yoon (2020). "From Gray to Red: Party Building and the Transformation of Beijing's Zhejiangcun."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29. No. 126, pp. 934-949.
- Li, H., L. Meng, Q. Wang and L.-A. Zhou. (2008). "Political connections, financing and firm performance: Evidence from Chinese private firm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87. No. 2, pp. 283-299.
- Lipset, S. M. (1959). "Some Social Requisites of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Legitim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53. No. 1, pp. 69-105.
- Parris, K. (1993). "Local Initiative and National Reform: The Wenzhou Model of Development." *The China Quarterly*. Vol. 134, pp. 242-263.
- \_\_\_\_\_. (1999). "The Rise of Private Business Interest." Merle Goldman and Roderick MacFarquhar (eds.). *The Paradox of China's Post-Mao Refor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p. 262-282.
- Pearson, M., M. Rithmire and K. S. Tsai (2020). "Party-State Capitalism in China." *Harvard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 No. 21-065, pp. 1-45.
- Rueschemeyer, D., E. H. Stephens and J. D. Stephens (1992). *Capitalist Development and Democra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chubert, G. and T. Heberer (2021). "State-business relations under Xi Jinping." Arthur S. Ding and Jagannath P. Panda (eds.). *Chinese Politics and Foreign*



- Policies under Xi Jinping: The Future Political Trajectory*. New York: Rutledge, pp. 105-130.
- Solinger, D. J. (2006). "The Creation of a New Underclass in China and its Implications." *Environment and Urbanization*. Vol. 18. No. 1, pp. 177-193.
- Strand, D. (1990). "Protest in Beijing: Civil Society and Public Sphere in China." *Problems of Communism*. Vol. 39. No. 3, pp. 1-19.
- Thomton, P. M. (2012). "The New Life of the Party: Party-Building and Social Engineering in Greater Shanghai." *The China Journal*. No. 68, pp. 58-78.
- Tsai, K. S. (2015). "The Political Economy of State Capitalism and Shadow Banking in China." *Issues & Studies*. Vol. 51. No. 1, pp. 55-97.
- (2017). "When Shadow Banking Can Be Productive: Financ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China."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Vol. 53. No. 12, pp. 2005-2028.
- Unger, J. (1996). "Bridges: Private Business,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Rise of New Associations." *The China Quarterly*. Vol. 147, pp. 795-819.
- Unger, J. and A. Chan (1995). "China, Corporatism and East Asian Model." *The Australian Journal of Chinese Affairs*. No. 33, pp. 29-53.
- White, G. (1993). "Prospects for Civil Society in China: A Case Study of Xiaoshan City." *The Australian Journal of Chinese Affairs*. No. 29, pp. 63-87.
- Wright, T. (2010). *Accepting Authoritarianism: State-society Relations in China's Reform Er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Yan, X. and J. Huang (2017). "Navigating Unknown Waters: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New Presence in the Private Sector." *The China Review*. Vol. 17. No. 2, pp. 37-63.
- Yoon, T. and J.-H. Jeong (2018). "Bedfellows with Different Dream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y-State and Private Businessmen in the Party Member Recruitment Process in Beijing's Zhejiangcun (浙江村 Zhejiang Villag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Vol. 25. No. 1, pp. 131-148.
- Zheng, Y. (2004). *Will China Become Democratic: Elite, Class and Regime Transition*. Singapore: Eastern Universities Press.
- 江陰市委統戰部江陰市委黨校聯合課題組 (2017). "新型政商關係构建中的統戰策略研究." 『江蘇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6期.
- 卿定文·程娜 (2020). "十八大以來我國民營經濟發展的政策創新探究." 『長沙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35卷. 第5期.

- 宮秀芬·魏亞男 (2019). “新時代非公有制經濟領域的統戰工作.” 『長白學刊』. 第3期.
- 金彥海 (2017). “遼寧營商環境存在的問題及對策.” 『遼寧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1期.
- 金正·周睿 (2020). “當前民營企業融資難的現狀、成因與對策.” 『中國商論』. 第19期.
- 康德顏 (2018). “改革開放40年我國非公有制經濟發展歷程與啟示.” 『時代報告』. 第12期.
- 唐昊 (2018). “廣東經驗：以協商民主助力構建新型政商關係.” 『同舟共進』. 第7期.
- 羅茜 (2021). “新冠疫情影響下中小企業幫扶政策存在的問題及對策研究.” 『現代商業』. 第2期.
- 梁小紅 (2021). “後疫情時代福建民營企業發展的融資支持體系建設研究.” 『吉林工程技術師範學院學報』. 第37卷. 第2期.
- 盧盛榮·郭學能·游云星 (2019). “影子銀行、信貸資源錯配與中國經濟波動.” 『國際金融研究』. 第4期.
- 廖儒凱·任嘯辰 (2019). “中國影子銀行的風險與監管研究.” 『金融監管研究』. 第11期.
- 劉丹 (2021). “關於構建親清新型政商關係的調查與思考.” 『湖南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22卷. 第1期.
- 劉迎秋 (2018). “習近平民營經濟思想的邏輯演進——從“民營經濟支柱論”到“民營經濟基礎論”. ” 『治理研究』. 第2期.
- 劉元春 (2018). “中美貿易摩擦的現實影響與前景探究——基於可計算一般均衡方法的經驗分析.” 『人民論壇·學術前沿』. 第16期.
- 劉在華 (2017). “淺談年輕一代非公有制經濟人士的健康成長.” 『吉林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1期.
- 李國強·李初 (2021). “創新制度，民營經濟在黨的領導下不斷發展壯大.” 『智慧中國』. 第7期.
- 李桂梅·鄭自立 (2016). “我省非公有制經濟人士思想動態調研與分析.” 『河北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4期.
- 李文喆 (2021). “中國影子銀行的經濟學分析：發展驅動因素.” 『經濟學家』. 第3期.
- 李盼盼·解建秀 (2019). “關於深入推進“萬人進萬企”助力民營企業發展壯大的對策建議.” 『遼寧經濟職業技術學院，遼寧經濟管理幹部學院學報』. 第6期.
- 李淑萍·劉長松 (2018). “現代治理體系下的新型政商關係的構建——以寧夏為例.” 『陝西社會主義學院學報』. 第1期.
- 萬建民·郭立琦 (2020). “千企調查報告：疫情影響下的10個“二八現象”. ” 『中國企業家』. 第3期.
- 牡丹江市委統戰部課題組 (2015). “非公經濟發展“三重門”問題亟待解決.” 『黑龍江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3期.
- 本刊首席時政觀察員 (2018). “設立“民企月” 跨越“三座山”. ” 『領導決策信息』. 第48期.
- 謝富勝·王松 (2021). “習近平論公有制經濟與非公有制經濟有機統一.” 『學術研究』. 第4期.
- 徐英 (2020). “中美貿易摩擦對我國民營企業的影響及對策研究.” 『中國市場』. 第28期.

- 聶勇鋼 (2021). “親清新型政商關係研究: 回顧與展望.”『廉政文化研究』. 第2期.
- 肖鋼 (2019). “中國影子銀行的治理與創新.”『新金融評論』. 第4期.
- 肖建平 (2019). “關於年輕一代非公經濟人士現狀和教育培養的調查研究——以湖北省為例.”『天津市社會主義學院學報』. 第1期.
- 肖文 (2021). “多措并舉助力民營經濟健康發展.”『人民論壇』. 4月上.
- 束贊 (2021). “制度體系與政治優勢: 統一戰線與國家制度關係的演變與張力.”『統一戰線學研究』. 第4期.
- 孫支南·韋浩亮 (2016). 『非公企業黨建工作指南』. 廣東高等教育出版社.
- 沈啓旺 (2017). “構建新型政商關係存在的問題及對策探討.”『內蒙古農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5期.
- 沈偉 (2019). ““競爭中性”原則下的國有企業競爭中性偏離和競爭中性化之困.”『上海經濟研究』. 第5期.
- 習近平 (2014). “辦公廳工作要做到“五個堅持”.”『秘書工作』. 第6期.
- 楊東 (2021). “《中國共產黨統一戰線工作條例》與《中國共產黨統一戰線工作條例(試行)》的文本對比.”『中央社會主義學院學報』. 第2期.
- 楊娟 (2021). “唯物史觀視野下習近平新時代非公經濟領域統戰思想探析.”第42卷. 第1期.
- 楊衛敏 (2016). “構建“親”“清”政商關係探析——學習習近平有關新型政商關係的重要論述.”『江蘇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3期.
- (2019). “構建新型政商關係的方法論考察——基於浙江省的實踐探索分析.”『中央社會主義學院學報』. 第2期.
- 余雪飛·宋清華 (2013). ““二元”信貸錯配特征下的金融加速器效應研究——基於動態隨機一般均衡模型的分析.”『當代財經』. 第4期.
- 閔曉紅 (2017). “黨的十八大以來非公有制經濟統戰政策的創新與發展.”『山西社會主義學院學報』. 第3期.
- 姚炳宇 (2020). “構建新型政商關係 護航民營經濟發展.”『新長征』. 第11期.
- 牛嬋 (2014). ““個轉企”為紡城提速.”『紡織服裝周刊』. 第31期.
- 俞萍 (2014). ““個轉企”的法律構造分析.”『商場現代化』. 第22期.
- 王可園 (2021). “習近平關於促進非公有制經濟發展的重要論述及其價值.”『福州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3期.
- 王建均 (2021). “新時代非公有制經濟領域統戰工作——新理念、新思想、新方針、新舉措.”『中央社會主義學院學報』. 第2期.
- 王德寧 (2017). “關於中小城市建立新型政商關係的思考——以遼寧省鐵嶺市為例.”『中國商論』. 第12期.
- 王瑞芳 (2018). 『輝煌40年——中國改革開放成就叢書(經濟建設卷)』. 安徽教育出版社.

- 王書柏·胡祎 (2021). “民營企業經營狀況分析及紓困措施——基于疫情期間全國範圍大樣本調查.”『中國發展』, 第21卷, 第2期.
- 王曉璉·何虹 (2017). “年輕一代非公有制經濟人士價值觀認同問題探析——以陝西省為例.”『陝西社會主義學院學報』, 第4期.
- 王喆 (2021). ““私營企業主”和“民營企業家”稱謂的歷史內涵辨析.”『秘書』, 第4期.
- 王喆·張明·劉士達 (2017). “從“通道”到“同業”——中國影子銀行體系的演進歷程、潛在風險與發展方向.”『國際經濟評論』, 第4期.
- 張國清·馬麗·黃芳 (2016). “習近平“親清論”與建構新型政商關係.”『中共中央黨校學報』, 第20卷, 第5期.
- 張李娟 (2019). “黨委政府與民營企業溝通協商制度研究.”『重慶行政』, 第1期.
- 張明 (2013). “中國影子銀行: 界定、成因、風險與對策.”『國際經濟評論』, 第3期.
- 張兵 (2019). “挖掉“三座山” 民企大發展.”『民生周刊』, 第6期.
- 張峰 (2018). “吃下定心丸 安心謀發展 習近平總書記對民營企業家有何期待.”『人民論壇』, 12月上.
- 張月·劉興平 (2020). “非公企業黨組織建設的歷史演變與現實思考.”『理論導刊』, 第5期.
- 張丁予·張端民 (2020). “中美貿易摩擦對我國民營企業的影響及對策研究.”『經濟視角』, 第1期.
- 莊聰生 (2020). “在沖擊中找機遇 在危機中求生存 在困境中謀發展——民營企業如何頂住疫情沖擊實現逆勢成長.”『領導科學論壇』, 第7期.
- 鄭尙植·趙雪 (2020). “新型政商關係推動高質量發展的作用機制與路徑選擇——以東北地區為例.”『中國西部』, 第1期.
- 丁少英·顏世磊·劉朱紅·任欣虹 (2018). “廣州市越秀區構建親清新型政商關係的實踐研究.”『探求』, 第6期.
- 程艷 (2020). “新冠肺炎疫情影響下我國民營經濟恢復發展對策研究——以安徽省為例.”『哈爾濱學院學報』, 第41卷, 第10期.
- 鄭春勇·楊乾 (2020). ““親清互掛”: 區域政商關係創新的探索與爭議.”『領導科學論壇』, 第11期.
- 齊洪華·趙艷 (2021). “推進“萬人進萬企”助力民營企業發展的對策研究.”『沈陽干部學刊』, 第23卷, 第1期.
- 中共河南省委統戰部課題組 (2019). “親清新型政商關係规范化制度化建設研究——以河南為例.”『江蘇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1期.
- 中國企業家調查系統 (2020). “新冠肺炎疫情對企業的影響與對策建議——千戶企業快速問卷調查報告.”『中國經濟報告』, 第2期.
- 中國銀保監會政策研究局課題組·中國銀保監會統計信息與風險監測部課題組 (2020).

- “中國影子銀行報告.”『金融監管研究』. 第11期.
- 中銀研究 (2020). “全面辯證看待債券市場違約問題.”『宏觀觀察』. 第53期.
- 朱建軍 (2019). “以政企干部“親清互挂”爲引擎高質量服務企業.”『江南論壇』. 第6期.
- 周爽·陳國慶 (2021). “中國進出口貿易發展困境及對策研究——基于民營企業發展現狀.”『內蒙古科技與經濟』. 第6期.
- 周志華 (2018). “我國民營企業的現狀、問題及對策.”『經濟與社會發展』. 第3期.
- 陳一良 (2019). “百名機關干部進駐百家重點民企 杭州“政府事務代表”機制的喜與憂.”『中國經濟周刊』. 第19期.
- 秦叢叢 (2020). “新型政商關係發展趨勢研究——以山東省爲例.”『廣西社會主義學院學報』. 第31卷. 第3期.
- 彭建國 (2020). “疫情之下中國經濟走勢與企業發展對策.”『中國發展觀察』. 第22期.
- 夏雨菲·高茂森 (2018). “新時代非公有制經濟發展理論內涵探要——學習習近平關於非公有制經濟的重要論述.”『改革與戰略』. 第11期.
- 夏紅莉·張建國·黃亞萍 (2019). “新時代年輕一代非公有制經濟人士健康成長問題研究——基于安徽省的調查與思考.”『廣西社會主義學院學報』. 第30卷. 第2期.
- 項飆 (2017). “正規化的糾結: 北京「浙江村」和中國社會二十年來的變化.”『二十一世紀』. 總第159期.
- 胡偉 (2020). “年輕一代非公有制經濟人士價值觀認同問題研究——基于云南省玉溪市的實證分析.”『雲南社會主義學院學報』. 第3期.
- 洪功翔 (2020). “關於社會主義初級階段民營經濟地位和作用的理論爭論.”『當代經濟研究』. 第6期.
- 侯立文 (2021). “疫情下民營企業勞動用工狀況及援企政策評價——基于上海市的調研.”『山東工會論壇』. 第27卷. 第3期.
- 侯遠長 (2017). “構建新型政商關係若干問題研究.”『學習論壇』. 第2期.
- 黃語東 (2018). “黨的十九大對非公有制經濟理論的新發展.”『桂海論叢』. 第34卷. 第3期.

## 2. 기타

- “중국 - 美·中 무역분쟁 후 수출기업 심각한 타격, 올 파산 사상 최대 504만 곳... 6개 중 1개꼴.”『조선일보』. 2018년 11월 2일.
- “China is sending government officials into companies like Alibaba and Geely.” *CNN Business*. September 24, 2019.
- “These 6 charts compare the US and China economies in the second year of their trade war.” *CNBC*. January 2, 2020.

- “2018年中國共產黨黨內統計公報。”『中國共產黨新聞網』. 2019年 7月 1日.
- “改革要快一点了!”『鳳凰周刊』. 2018年 11月 5日.
- “郭樹清中國人民銀行黨委書記 中國銀保監會主席 打好“組合拳”紓解民營企業融資困境.”『新華網』. 2018年 11月 8日.
- “百萬元倒閉, 小店“熬冬”.”『新華網』. 2021年 3月 2日.
- ““批駁“私營經濟離場論”創作談.”『人民網』. 2019年 11月 29日.
- “新時代統一戰線工作的基本遵循——中央統戰部負責人就《中國共產黨統一戰線工作條例》答記者問.”『新華網』. 2021年 1月 5日.
- “我市召開深化“萬人進萬企”工作部署會議.”『新華網』. 2020年 11月 9日.
- “讓民營企業迎來新的春天.”『搜狐網』. 2017年 10月 22日.
- “以高質量黨建助推非公企業高質量發展(奮斗百年路 啟航新征程·黨旗在基層一線高高飄揚).”『人民網』. 2021年 6月 10日.
- “人大教授狠批張五常、吳敬琏等經濟學家鼓吹私有制.”『新浪網』. 2018年 1月 14日.
- “人社部副部長: 民營企業要以職工為本, 讓職工共同參與企業管理.”『搜狐網』. 2018年 9月 19日.
- ““一二五”目標引導銀行資產結構優化.”『新華網』. 2018年 11月 12日.
- “再解“新的社會階層人士”.”『中國統一戰線新聞網』. 2021年 5月 16日.
- “從“離場論”到“自己人” 民營經濟惊心动魄的50天.”『新浪網』. 2018年 11月 4日.
- “中國共產黨統一戰線工作條例(試行).”『中國共產黨新聞網』. 2015年 9月 23日.
- “中國企業改革與發展研究會關於新冠肺炎疫情對企業經營發展影響的調查分析.”『新華網』. 2020年 3月 28日.
- “中國民營企業家: 永遠在通往監獄路上?”『自由亞洲電台』. 2019年 1月 16日.
- ““中國私營經濟離場論”引爭議 輿論吁激發民營經濟活力.”『新華網』. 2018年 9月 15日.
- “中國影子銀行首份官方報告出爐透露後續監管方向.”『中國金融新聞網』. 2020年 12月 4日.
- “中央統戰部: 要為中國富二代樹立行為規範.”『新浪網』. 2015年 6月 12日.
- “中央統戰會議召開 習近平新提重點團結三類人.”『新浪網』. 2015年 5月 21日.
- “把保障就業放在宏觀政策優先位置(權威發布).”『人民網』. 2021年 8月 31日.
- “評論: 與時俱進不失“共產黨”本色.”『BBC 中文網』. 2010年 6月 28日.
- “河南鶴壁派駐幹部到有潛力的民營企業 企業“服務管家”真管事兒.”『中國網』. 2019年 10月 21日.
- “杭州市政府為何抽調幹部進駐阿里、吉利等民企?”『觀察者網』. 2019年 9月 23日.
- “杭州向阿里巴巴等100家企業派駐“政府事務代表”.”『浙江在線』. 2019年 9月 20日.
- “解構政商關係新生態: 不能“勾肩搭背”也不能“背對背”.”『中國共產黨新聞網』. 2015年

3月 27日.

國家市場監督管理總局. [http://www.samr.gov.cn/djzcj/scdjgz/wjfg/201902/t20190215\\_281570.html](http://www.samr.gov.cn/djzcj/scdjgz/wjfg/201902/t20190215_281570.html). (2021년 7월 2일 검색)

國家統計局. <http://www.stats.gov.cn/tjsj/ndsj/2013/indexch.htm>. (2021년 7월 2일 검색)

\_\_\_\_\_. <http://www.stats.gov.cn/tjsj/ndsj/2020/indexch.htm>. (2021년 7월 2일 검색)

人民網. <http://cpc.people.com.cn/GB/64156/64157/4418474.html>. (2021년 8월 2일 검색)

\_\_\_\_\_. <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64569/65444/4429114.html>. (2021년 8월 2일 검색)

\_\_\_\_\_. <http://cpc.people.com.cn/GB/85037/8405407.html>. (2021년 8월 2일 검색)

中國農工民主黨. <http://www.ngd.org.cn/jczt/2019bwcx/2019xxzl/65099.htm>. (2021년 7월 2일 검색)

中央紀委國家監委網站. [https://www.ccdi.gov.cn/100year/202106/t20210629\\_245048.html](https://www.ccdi.gov.cn/100year/202106/t20210629_245048.html). (2021년 7월 19일 검색)

中央政府門戶網站. [http://www.gov.cn/guoqing/2018-03/22/content\\_5276318.htm](http://www.gov.cn/guoqing/2018-03/22/content_5276318.htm). (2021년 7월 20일 검색)

\_\_\_\_\_. [http://www.gov.cn/gzdt/2011-01/04/content\\_1778426.htm](http://www.gov.cn/gzdt/2011-01/04/content_1778426.htm). (2021년 9월 13일 검색)

\_\_\_\_\_. [http://www.gov.cn/jrzq/2013-11/15/content\\_2528179.htm](http://www.gov.cn/jrzq/2013-11/15/content_2528179.htm). (2021년 7월 2일 검색)

\_\_\_\_\_. [http://www.gov.cn/ldhd/2012-03/21/content\\_2096653.htm](http://www.gov.cn/ldhd/2012-03/21/content_2096653.htm). (2021년 7월 2일 검색)

\_\_\_\_\_. [http://www.gov.cn/ldhd/2012-11/17/content\\_2268826\\_3.htm](http://www.gov.cn/ldhd/2012-11/17/content_2268826_3.htm). (2021년 7월 2일 검색)

\_\_\_\_\_. [http://www.gov.cn/ldhd/2012-11/17/content\\_2268826\\_7.htm](http://www.gov.cn/ldhd/2012-11/17/content_2268826_7.htm). (2021년 7월 2일 검색)

\_\_\_\_\_. [http://www.gov.cn/shuju/2021-01/19/content\\_5580906.htm](http://www.gov.cn/shuju/2021-01/19/content_5580906.htm). (2021년 7월 1일 검색)

\_\_\_\_\_. [http://www.gov.cn/test/2008-08/01/content\\_1061490\\_3.htm](http://www.gov.cn/test/2008-08/01/content_1061490_3.htm). (2021년 8월 2일 검색)

\_\_\_\_\_. [http://www.gov.cn/xinwen/2016-03/09/content\\_5051083.htm](http://www.gov.cn/xinwen/2016-03/09/content_5051083.htm). (2021년 7월 2일 검색)

\_\_\_\_\_. [http://www.gov.cn/xinwen/2016-10/13/content\\_5118440.htm](http://www.gov.cn/xinwen/2016-10/13/content_5118440.htm). (2021년 7월 2일 검색)

- \_\_\_\_\_. [http://www.gov.cn/xinwen/2018-11/01/content\\_5336616.htm](http://www.gov.cn/xinwen/2018-11/01/content_5336616.htm). (2021년 7월 2일 검색)
- \_\_\_\_\_.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4-11/26/content\\_9260.htm](http://www.gov.cn/zhengce/content/2014-11/26/content_9260.htm). (2021년 11월 2일 검색)
- \_\_\_\_\_. [http://www.gov.cn/zhengce/2017-09/25/content\\_5227473.htm](http://www.gov.cn/zhengce/2017-09/25/content_5227473.htm). (2021년 8월 2일 검색)
- \_\_\_\_\_. [http://www.gov.cn/zhengce/2019-11/05/content\\_5449023.htm](http://www.gov.cn/zhengce/2019-11/05/content_5449023.htm). (2021년 7월 19일 검색)
- \_\_\_\_\_. [http://www.gov.cn/zhengce/2019-12/22/content\\_5463137.htm](http://www.gov.cn/zhengce/2019-12/22/content_5463137.htm). (2021년 7월 2일 검색)
- \_\_\_\_\_. “[http://www.gov.cn/zhengce/2020-09/15/content\\_5543685.htm](http://www.gov.cn/zhengce/2020-09/15/content_5543685.htm).” (2021년 8월 2일 검색)
- \_\_\_\_\_. [http://www.gov.cn/zhengce/2020-09/16/content\\_5543717.htm](http://www.gov.cn/zhengce/2020-09/16/content_5543717.htm). (2021년 8월 2일 검색)
- \_\_\_\_\_. [http://www.gov.cn/zhengce/2021-01/05/content\\_5577289.htm](http://www.gov.cn/zhengce/2021-01/05/content_5577289.htm). (2021년 8월 2일 검색)
- \_\_\_\_\_. [http://www.gov.cn/zhuanti/2017-10/27/content\\_5234876.htm](http://www.gov.cn/zhuanti/2017-10/27/content_5234876.htm). (2021년 7월 2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21년 11월 03일 |

| 논문심사일 : 2021년 11월 23일 |

| 게재확정일 : 2021년 12월 03일 |



| ABSTRACT |

## **A Study on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Policies on the Private Sector during the Xi Jinping Era**

**Taehee Yo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Seoul National University)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CCP)'s policy on the private sector during the Xi Jinping era, the article asserts the following arguments. During the Xi Jinping era, the CCP proposed a series of policies to foster and improve the status of the private sector while endeavoring to expand its influence in the private sector through the Party building and United Front work. In addition, the CCP intended to change the way of interaction between the state and private entrepreneurs by suggesting the New Type of Government-Business Relationship. In this context, the CCP achieved the quantitative growth of the private sector, expansion of Party organizations in the private sector, political consensus with young private entrepreneurs, and new ways of mutual interaction between government officials and private entrepreneurs. However, government officials' complacency after the proposal of the New Type of Government-Business, securing a loan for the private sector, and the issues over the US-China trade conflict and COVID-19 are the tasks that require further consideration in the policies for the private sector.

- Key words: Xi Jinping, Chinese Communist Party, Private Entrepreneurs, United Front, New Type of Government-Business Relationship